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프랑스 정부의 2월 19일자 정책

이정원 (프랑스 리옹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프랑스 사회에서 경제위기의 여파는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에서는 국내 각종 경제지수의 악화와 함께 과달루페(Guadeloupe), 마르티니크(Martinique) 등 해외 프랑스령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이 격화되면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29일, 프랑스 전역에서 약 250만 명¹⁾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안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총파업 이후,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응할 정책 마련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개시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난 2월 18일 대표자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프랑스 정부는 몇 가지 정책방안을 발표했는데, 이하에서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노사 당사자들의 입장 등을 정리해 본다.

1) 노조 추산, 정부 추산은 약 100만 명, 르몽드 1월 29일자 《Mobilisation massive contre le gouvernement》 참조

■ 정책의 주요 내용

이번 정책들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계층들이다. 이에 따라, 만 25세 미만의 청년근로자, 부분실업제 적용근로자, 중산층 중에서도 저소득가구 등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중산층 저소득가구지원

우선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회원조에 있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중산층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립개별화보조금(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²⁾을 받고 있는 66만 가구 혹은 양육보조금대상자(Complément libre choix du mode de garde)³⁾인 47만 가구 혹은 장애아동이 있는 14만 가구, 혹은 직장을 다시 찾은 실직자가 양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가사도우미, 학습지원, 양육보조 등 대인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200유로 상당의 수표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전액 국가에 의해 부담되며, 첫 분기가 끝나기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약속되었다. 한편, 취학아동이 있고 현재 신학기 보조금(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⁴⁾을 받고 있는 가정에는 150유로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오는 6월에 지급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과세지표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약 200만 가구에 대하여 2009년 소득세의 2, 3번째 납부가 면제될 것이다.⁵⁾ 동 조치로 인하여 대상이 되는 각 가구당 평균적으로 약 200유로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첫 번째 항목을 조금 상회하는 약 200만 가구들에게도 추가 감세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2)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생활하는 데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3)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특정 소득 미만의 가구에서 양육서비스 이용을 위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4) 6세 이상 18세 미만 취학아동을 둔 저소득가정에게 매년 신학기 직전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보통 8월 말에 지급된다.

부분실업보상

부분실업제도(Chômage partiel)란 사용자가 기업에서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근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분실업 기간 동안 근로자는 소득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기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 총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러한 부분실업 보상 수준을 60%에서 75% 수준으로 높일 것을 약속했다. 다만 그 구체적 시행에 관하여는 국가와 산업별·기업별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청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보조금지급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실직한 근로자들 중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기간 4개월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주로 청년근로자 혹은 기간제근로자들이 해당될 이번 조치에 따라서, 1년간 최소 2개월 이상을 일하고 실직했거나, 지난 28개월간 2개월에서 4개월을 근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5) 2008년 기준, 프랑스의 소득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간 소득액	부과율	가구수(백만)
0 ~ 5,852 €	0 %	0,1
5,853 ~ 11,673 €	5,5%	2,1
11,674 ~ 25,926 €	14%	11,2
25,927 ~ 69,505 €	30%	2,8
69,505 € ~	40%	0,3

이 중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 5,853€ 에서 11,673€ 의 범위에 속하는 약 210 만가구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다. 한편, 소득세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다음 해에 3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번 조치는 이 3회의 납부 중 2회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정부 조세사이트 <http://www.impots.gouv.fr>/참조>

사회투자기금 설치

실업자들의 재고용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사회투자기금(Fonds d'investissement social)을 설치한다. CFTD가 제안한 동 기금은 정부의 절반의 지원을 더하여 약 25억~30억 유로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근로자, 주주, 기업 간의 추가이익분배 사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시행 평가와 관련하여 노사당사자들과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2009년 사회적 대화의 논의 사안으로 기업경영, 근로자대표제도의 현대화, 남녀임금평 등 그리고 노동위원 선출 현대화 등의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노사 당사자의 입장

실질적으로 이번 대표자회의는 노사정 간의 교섭이 아닌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노사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정책 내용 발표 후, 사용자단체 Medef는 이번 조치들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며, 이번 회의가 '협상'이 아닌 단순히 대책들을 나눠보는 자리였던 만큼 크게 구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언급된 쟁점 중의 하나인 기업 간의 추가이익분배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1노동조합인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현재 위기에 대처하는데 매우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과, 부분실업보상금 인상에 있어 개별 협약에 그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TD)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 전기 등 필수소비에 대한 부가세 인하 등 근로자 소득부문에 관한 사안들과, 특히 스스로 내놓은 안인 사회투자기금 설치에 있어 정부 지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 힘(FO)’ 역시 정부가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을 위해서는 특별한 즉각적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한편으로 부분실업제도의 기간제한연장과 임금보장수준을 80%로 높일 것 등을 요구했다.

결국 8개 노동조합연맹은 현재의 심각한 사태와 프랑스 정부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동떨어져 있음을 주장하며, 3월 1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⁶⁾ 현재 프랑스 사회당, 공산당 등 좌파 정당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평가 및 전망

사르코지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정책들을 요약하면, ‘경제위기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은 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되겠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실질구매력 확보를 요구해 온 노동조합 측의 주장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책 발표 직후 지난 2월 25일, 노동부의 고용통계가 발표되었다. 동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에만 프랑스의 실업자수는 9만여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실업률 계산방식이 도입된 1991년 이후로 최고의 기록이다.⁷⁾ 특히 새로 등록된 실업자군에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파업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대규모로 행해진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처럼 실업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지게 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표자회의에서 ‘고용’을 위한 기업에의 투자정책만이 이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⁸⁾ 결국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분적 소득보전이 정부가 내놓

6) 2월 23일자 CFDT, CFTC, CFE-CGC, CGT, FO, FSU, Solidaires, UNSA 연합 선언문 《Appel du 19 mars 2009》 참조.

7) 《Demandeurs d'emploi inscrits et offres collectées par Pôle emploi en janvier 2009》, 동 자료에 의하면 1월말 기준 총 실업자수는 2,204,500명이고, 이전 달에 비해 4.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IMG/pdf/2009.02-09.1.pdf> 참조

은 한계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지급이 대부분 일회성 조치인데다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감소된 소득을 얼마나 보상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위 정책들의 시행에는 총 26억 유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어들이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이다. 당장에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프랑수와 피용(François Fillon) 국무총리는 발표된 정책 중 우선적으로 시행할 조치로서, 청년실직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오는 보조금은 오는 4월에, 소득세 감면은 이번 납부일로부터 적용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는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절차를 개시했으며, 정책평가위원회를 바로 설치하여, 이번 정책들의 시행을 감독, 평가하도록 했다.⁹⁾

이처럼 프랑스 정부가 정책 발표 후 나름대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 만큼이나 다시 예고된 총파업의 압력이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조 측이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인상 등, 실질적인 구매력 인상에 대한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한 협의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협의 과정이 역시 같은 임금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과달루페나 마르티니크 분쟁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지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KLI**

8) 르몽드 2월 26일자, 《Choisir entre salaire et emploi : vraie question ou faux débat?》; 사르코지 대통령은 같은 날 TV연설에서 “근로자 열 명 가운데 한 명만이 적용을 받는 최저임금의 증대로는(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미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소규모 기업들의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며 임금인상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9)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http://www.premier-ministre.gouv.fr> 참조